

‘위장부도’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의 코스모스 전자(회장 정규성·83)는 83년 설립당시 자본금 2억원·종업원 1백여명 규모로 출발, 8년만에 자본금 1백억원·종업원 약 1천여명·연간 매출액 3백70억원의 규모로 급성장한 세계적 규모의 소형TV 수출업체이다. 자산만도 4백14억원에 이른다.

또 사주인 정회장과 그의 아들 정명진은 서울 명동의 코스모스백화점, 전남 무안의 코스모스전자 제2공장, 의정부의 코스모스전기, 용인의 신갈고교, 하얏트호텔 등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든든한 재력가이다.

7억원을 동원못해 부도를 낼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한편, 형편없는 저임금과 12시간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회사측의 이윤추적의 도구가 됐던 코스모스노동자들은 87년에 노조를 설립, 4년간의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내의 핵심적인 민주노조로 자리잡아왔다.

회사측은 이런 노조에 대해 “말 잘듣는 노조가 필요하다. 위장부도로 노조를 무력화시킨 명성전자 경영자가 부럽다”며 단교교섭 석상에

서 서슴없이 거부감을 나타내곤 했었다.

이번 사태의 직전까지 진행된 단협갱신교섭에서도 회사는 경단협지침을 골자로 한 개악안을 제시, 교섭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10차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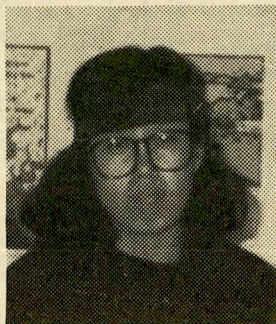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안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교섭시기와 맞물려 인천지방 노동청에서는 6차례에 걸쳐 노조에 소환장을 발부했고, 부평서 정보과 형사들이 공공연하게 회사를 출입하면서 관리들과 접촉했으며, 회사에서는 조합원 50명의 해고설을 유포해 조합의 분열과 집행부의 위축을 기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틈이 생기지 않자 회사의 경영진은 경영악화를 내세워 위장부도를 내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1천여 코스모스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3백여 부품업체



## ‘위장부도’ 수법 공동투쟁으로 막아야



를 도산위기를 조장해 수천여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였다.

한마디로 자본가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존 및 고용불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코스모스전자의 위장부도는 코스모스노동자들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업종다각화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산업구조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뿐더러, 부평공단에서의 노조활동을 전면 봉쇄해 91임투의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회사가 낸 7억원의 부도가 노조와해를 겨냥한 위장부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부도가 난 이후의 회사측의 대응은 부도수습에 있지 않았다. 관리직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조합원들에게 사표를 강요, 노조를 분열·이간시키려 했으며 회사정리의 수순을 밟아나갔다. 마치 노조때문에 회사가 망한 양 악선전을 해대면서.

또한 조합원 85명의 명동사무실 항의투쟁으로 성사되었던 교섭석상에서도 회사측은 “노조는 체제전복세력이고 노조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를 일관해 노조를 음해할 뿐이었다. 심지어 경영책임

에 대한 것까지 노조에 전가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코스모스 전자 위장부도 본질은 명백하다. 이전의 위장폐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신종노조탄압의 수단인 것이다.

즉, 91임투를 앞두고 정권과 자본이 결탁, 인천지역 노조협의회와 핵심사업장인 코스모스전자노조를 껌으로써 임투분위기를 침체시키려는 신종탄압수단인 것이다.

위장부도라는 신종수법은 비단 코스모스노조에만 휘둘러진 ‘탄압의 칼’이 아니다.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명성전자·기상전자 등 주로 중소사업장들의 사용자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일천만노동자는 언제 또 우리의 목을 겨누게 될 지 모를 ‘위장부도’사태를 공통의 문제도 인식, 공동투쟁의 대오를 갖추어야 한다.

또 현정권도 자본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위장부도를 낸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당장 내놔야 한다.

**이상미**

〈코스모스전자노조위원장〉